

부산서 에너지 국제행사 동시다발 재생에너지·AI 연계 미래비전 제시

산업부, ‘에너지슈퍼 워크’ 설명회
AI 활용한 에너지 혁신·전환 논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목표 설정
글로벌 기업들 최신기술 전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주한 외국대사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에너지슈퍼 워크’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슈퍼워크란 다음 달 하순 부산에서 예정돼 있는 4개의 에너지 관련 국제행사를 가리킨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베트남, 일본 등 주한 외국대사관 43곳이 참석했다.

에너지슈퍼워크 기간에는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8월 27~28일)을 비롯해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8월 25~27일),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8월 25~27일)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가 개최된다. 또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8월 27~29일)가 동시에 열린다.

이 기간 약 40개 회원국의 에너지장관 및 정부대표단과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 및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및 누리마루에서 개최된다.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인 전력공급, AI 활용 에너지 혁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청정 및 미션이노베이션 에너지장



최태원(앞줄 왼쪽부터) 대한상의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희성 CF연합 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관회의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효율, 전력전환, 미래연료(수소), 에너지와 AI, 탄소저감 기술 등이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에너지기구·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국내에선 기후 및 에너지 분야 관련 약 10개 정부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산림청,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부산광역시 등이다.

올해 박람회에는 파티 비를 IEA 사무총장과 마누엘라 페로 월드뱅크 부총재의 축사와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글로벌리더십, 에너지, 인공지능(AI), 기후 3개 서밋에서 12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또 삼성, LG, 두산에너지

빌리티, 한화큐셀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 수출상담회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주한 외국대사관 설명회에서 “대한민국 새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에너지-AI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슈퍼워크는 에너지장관회의와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연계돼, 약 40개국 장관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농협, 농산물 해외판로 확대 나선다

수출현장서포터사업 본격 가동

농협 경제지주가 ‘2025년 수출현장서포터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수출현장서포터사업은 농협경제지주가 농산물 및 농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시장개척 ▲수출상품화 ▲해외인증취득 등을 지원하는 ‘수출농협 맞춤형지원’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경북 영주 풍기농협에서는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풍기농협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농산물 공판장을 중심으로 연 400억 원 이상의 내수시장 매출을 올리는 사업장으로, 수출로 사업범위를 확장하고자 이번 수출현장서포터사업에 참여했다.

풍기농협의 수출품목은 복숭아로,

해마다 반복되는 국내 복숭아 가격 하락에 대비해 추가적인 판로를 마련하고자 수출 길을 찾아 나서게 됐다. 풍기농협 관계자는 “수출 경험이 없다보니 해외 시장 개척 방법을 몰라 막막했다”며 “상담을 통해 수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농협이 겪는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농협의 신청을 받아, 현장 상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협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 확대방안 모색

산업부, 외투 유치·지역 특화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부산 명지국제도시에서 ‘2025년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첨단산업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 유공자 18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2003년 7월1일을 기념해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처음 열렸고 올해는 부산에서 2번째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9개 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

했다.

행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업무 유공자 18명에 대한 포상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법 실무강의와 타 특구 개발 사례 등 실무교육 ▲부산신항,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등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시설 및 입주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이 실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정부의 경제회복 노력에 경제자유구역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수도권은 외국인투자 중심, 지방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개발의 거점으로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서부발전

여름철 발전설비 점검

전력수급 안정 대책 화상회의

한국서부발전이 전력수요 급증 기간에 대비해 전력공급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와 발전설비 집중 점검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8일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 대책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 여름 전력 수급 대책기간은 14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68일 간이다.

이 기간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는 94.1~97.8기가와트(GW)로 지난해 8월 20일 기록된 역대 최대치인 97.1GW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전력수급 비상 상황 보고·긴급 대응 복구 체계·연료 확보 상황·풍수해 대비 취약설비 보강·관리 방안 등 발전설비 안정 운영 대책 등을 두루 살폈다.

서부발전은 14일부터 전력수급 상황실과 24시간 긴급 복구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이 기간 가상 고장훈련과 기상특보 대비 상황관리 훈련을 병행해 긴장감을 유지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임금체불 근로자 1% 저리융자 지원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이달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

임금체불을 겪는 근로자들이 연이율 1%의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생계를 위한 정책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81억 원이 배정됐다.

체불청산지원융자사업은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주 융자의 금리는 1억5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과 관련해 신용 3.7%, 담보 2.2%였다. 근로자생계비용자 금리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로 시행됐다.

이번 추경으로 사업주는 1%포인트(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는 0.5%p 내린 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하고 피해근로자를 지원하기



세종 고용부 청사.

/뉴시스

위해 이같이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3개월 안에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장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 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폭염 속 녹조발생 위험에 정수장 일제 점검

환경부, 전국 102곳 대응 실태 조사

정부가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속되는 폭염에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환경부는 8일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 102곳에 대한 녹조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조류 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살폈다.

점검 결과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와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었다. 분말활성탄도 적정 비축기준인 ‘10일 사용량 이상’으로 확보됐다.

환경부는 정수장 운영 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도 개최한다.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 관리자



지난 5월 팔당호 일대에 발생한 녹조. /뉴시스

들은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조류 발생 정도와 단계별 상황에 따른 취수장·정수장 대응 방안을 토론했을 예정이다. 또한 한 상수원에 조류가 대량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정수장 대응 시나리오를 시연하는 등 실제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수장 운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강한 경각심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